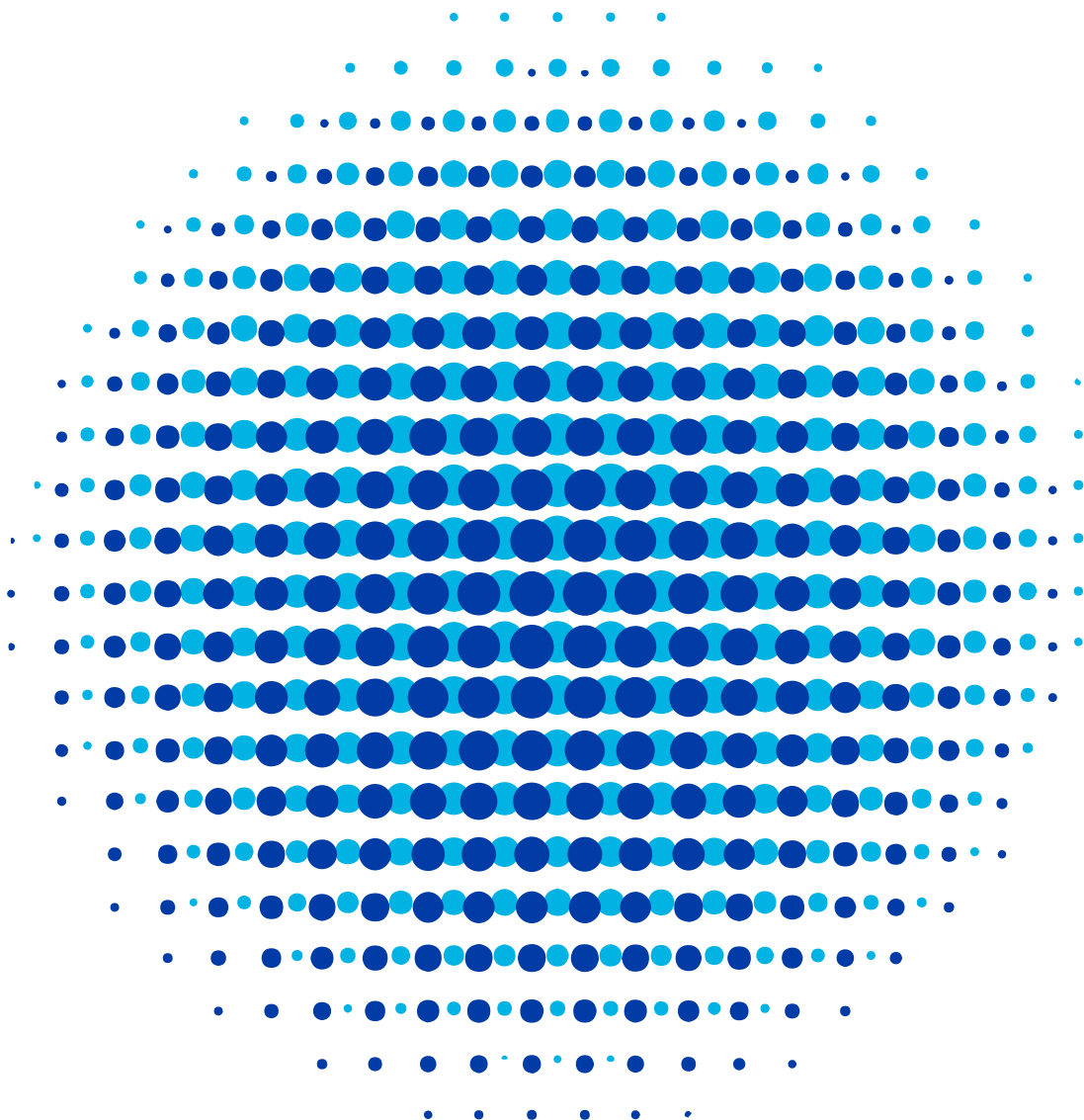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이행진단 및 발전방안 연구



2025. 10.

[요약보고서]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이행진단 및 발전방안 연구**

2025. 10.

제 출 문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 귀하

“본 보고서를 요약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5년 10월 24일

연구과제명: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이행진단과 발전방안 연구

수행기관: 사단법인 시민

수 행 자: [책임연구원] 조 철 민 (사단법인 시민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박 영 선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연구교수)

서 미 화 (공익활동연구소 소장)

[연구보조원] 김 유 리 (사단법인 시민 사무처장)

김 승 순 (사단법인 시민 실장)

연구기간: 2025년 4월 24일~10월 24일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목 차 -

I. 연구개요와 내용

- 1. 연구개요 1
- 2. 연구내용 2

II. 이행성과 분석

- 1. 개요 4
- 2. 분석 결과(1): 1기 기본계획 5
- 3. 분석 결과(2): 2기 기본계획 7
- 4. 시사점 9

III. 정책환경진단

- 1. 지원정책의 범주 11
- 2. 정책환경의 영향 12
- 3. 사회적 인식 제고 필요 13
- 4. 공익활동의 경제적 가치 조명 14
- 5. 정책사례로부터의 시사점 참조 14

IV.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숍 결과분석

- 1. 워크숍 개요 16
- 2. 1·2기 기본계획 과제 평가 및 정책환경 진단 17
- 3. 3기 기본계획 비전 체계도 설계 20

V. 제3기 기본계획(안)

- 1. 기본계획 비전체계 22
- 2. 기본계획 전략과제 24

I. 연구개요와 내용

1. 연구개요

1) 기본사항

- 연구명: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이행 진단 및 발전 방안 연구
- 연구기간: 2025년 4월~10월
- 수행기관: (사)시민
- 연구진: [책임연구원] 조철민((사)시민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박영선(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연구교수), 서미화(공익활동연구소 소장)
[연구보조원] 김유리((사)시민 처장), 김승순((사)시민 실장)

2) 연구목적과 범위

가. 목적

-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기본계획 이행에 대한 평가와 분석 및 시민사회와 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한 발전적인 기본계획 방향과 목표 제시
- 경기도 실정을 반영한 연차별 정책사업 제안

나. 범위

-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정책의 추진 방향과 목표
- 1·2기 기본계획 이행에 대한 진단과 평가
-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제도 진단과 평가
- 경기도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향후 비전, 미션, 핵심목표, 전략과제, 연도별 추진계획 제시
- 경기도 특성 및 도민과 시민사회 요구를 반영한 연차별 사업계획 제안

2. 연구내용

1) 분석1: 이행성과평가

가. 분석방법

- 제1기와 제2기 기본계획 전략목표-과제 체계에 기반한 정책사업 결과 정렬(기본계획 전략목표와 과제별 지원사업을 연도별·시행주체별 분류)
- 수행된 지원사업 건수의 분포에 기반한 정량평가
- 그간 축적된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관계자 평가의견 수렴을 통한 정성평가

나. 분석결과의 담론화

- 분석결과를 토대로 연구진의 해석작업을 거쳐 이행성과평가의 결론을 담론화하기 위한 명제형태의 논리 초안 도출
- 연구진과 이해관계자 공동워크숍을 통해 논리초안 검토와 토론을 거쳐 이행성과평가에 관한 논리명제 확정
- 연구진이 확정된 논리명제별 이행성과평가 내용 서술

2) 분석2: 정책환경진단

가. 분석방법

- 환경분석: 경기도와 시·군의 시민사회와 공익활동 관련 정책환경진단
- 사례조사: 경기도 시민사회와 공익활동 정책발전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지닌 해외 정책사례조사

나. 정책환경진단 결과의 담론화

- 분석결과를 토대로 연구진의 해석작업을 거쳐 이행성과평가의 결론을 담론화하기 위한 명제 형태의 논리 초안 도출
- 연구진과 이해관계자 공동워크숍을 통해 논리 초안 검토와 토론을 거쳐 이행성과평가에 관한 논리명제 확정
- 연구진이 확정된 논리 명제별 이행성과평가 내용 서술

3) 수립: 참여형 계획수립

가. 공동워크숍

- 연구진과 이해관계자 집단을 대표하는 주체들로 구성된 10인 이내의 집중적 논의가 가능한 소집단

구성

- 이해관계자: 센터 관계자, 담당부서 공무원, 시민사회활성화위원, 센터운영위원, 지원사업 참여자, 현장활동가, 지역사회 전문가 등
- 이해관계자들의 부담감을 고려해 연구진이 초안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공동워크숍 논의를 통해 내용을 구체화하고 이를 다시 연구진이 후속작업을 통해 완성해 가는 적정수준의 참여형 계획수립 과정 반복 진행
- 연구기간의 한계를 고려해 공동워크숍은 2~3시간 가량의 모임 형태로 4회차 진행

나. 자문회의

- 착수·중간·최종보고회를 겸해 관련 전문가 자문의견 청취·반영
 - 자문위원: 경기 지역 시민사회 관련 학계·현장 전문가 3인 가량
- 자문회의 내용
 - 착수보고회: 연구방향과 계획에 관한 검토 및 제언
 - 중간보고회: 분석결과와 제3기 기본계획 비전전략체계(안) 검토 및 제언
 - 최종보고회: 제3기 기본계획(안) 내용 전반에 관한 검토 및 향후 추진을 위한 제언

<표 1-1> 연구과정

단계/과업		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주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준비	협의·계약																													
	착수보고회/자문회의																													
	연구진 회의1																													
분석 1	이행성과평가: 조사분석																													
	정책환경진단: 조사분석																													
	공동워크숍1																													
	연구진 회의2																													
분석 2	이행성과평가: 담론화																													
	공동워크숍2																													
	연구진 회의3																													
	정책환경분석: 담론화																													
수립	공동워크숍3																													
	연구진 회의4																													
	중간보고회/자문회의																													
	공동워크숍4																													
종료	최종보고회																													
	연구과정 마무리																													

II. 이행성과 분석

1. 개요

1) 비전체계

<표 II-1> 제1기, 제2기 기본계획 비전체계

	1기 기본계획(2020~2022)	2기 기본계획(2023~2025)
비전	경기도 공익활동 활성화 생태계 구축	도민이 함께하는 공익활동, 변화를 만드는 경기
목표	지속가능한 공익활동 성장지원	1. 공익활동 주체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2. 연결과 협력 기반 시민 사회 생태계 조성 3. 시민사회활성화 정책의 효과적 추진체계 구축
전략	1) 공익활동네트워크 강화 2) 사회문제해결 민관협치 3) 공익생태계 역량강화 4) 공익활동 기반강화	1-1) 시민사회조직 및 공익활동가 역량강화사업 확대 1-2)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인정 방안 마련 1-3) 비영리일자리 확대 및 시민사회 경제적 기반조성 2-1) 공익활동 참여 다각화 및 역량강화 교육체계 구축 2-2) 시민참여영역 협력적 네트워크 강화 2-3) 시민사회 생태계 기반조성 3-1) 시민사회 공익활동 관련 제도 개선 3-2)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 및 센터 위상 강화
과제	1)-① 공익활동발전연구 1)-② 공익활동 공동 대응력 향상 1)-③ 공익활동 민관합동 워크숍 개최 1)-④ 공익활동 홍보채널 활성화 2)-① 시·군별 공익촉진 장려 2)-② 공익생태계 조성 정책토론장 2)-③ 지역순회 간담회 2)-④ 파트너십을 통한 시민사회 역량강화 3)-①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사업지원 3)-② 공익활동가 성장지원 3)-③ 공익활동 스타트업 지원사업 3)-④ 비영리민간단체 맞춤형 공익역량강화 4)-① 공익활동촉진위원회 구성·운영 4)-②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운영	1-1)-① 다양한 지원으로 공익활동가 지속성 제고 1-1)-② 공익활동단체 운영 및 사업역량강화 지원 1-2)-① 정책연구를 통한 공익활동 인정사업 개발·추진 1-3)-① 비영리일자리 여건 개선 및 확대 1-3)-② 시민사회 경제적 기반조성 2-1)-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극대화 2-1)-② 사회문제해결형 경기 도민 공론장 활성화 2-1)-③ 경기도민 공익활동 통합교육체계 구축 2-2)-① 공익단체 및 활동가 네트워크 활성화 2-2)-② 시민참여영역 협력체계 구축 2-2)-③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목표(G-SDGs) 연계사업 추진 2-3)-① 공익활동 거점 공간 확충 2-3)-②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운영 2-3)-③ (가칭)경기도 공익활동 박람회 개최 3-1)-①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 위원회 역할 강화 3-2)-① 시민사회영역 전담부서 기능 강화 3-2)-② 경기도-시·군 협력체계 구축 및 연계 강화 3-2)-③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기능강화 및 운영효율성 제고

2) 분석 방법

○ 정량분석

- 분석대상: 1기 기본계획(2020~2022) 및 2기 기본계획(2023~2025) 중 2025년을 제외한 5개년 간 부서, 도센터, 시·군센터(6개¹⁾) 사업보고서 및 회의록, 홈페이지에 제시된 단위사업

1) 2020년 0개소, 2021년 2개소, 2022년 5개소, 2023년 6개소, 2024년 5개소 운영

- 분석방법: 부서, 도센터, 시·군센터 이행과제별 단위사업 평균횟수²⁾에 따른 이행정도를 알파벳으로 점수화
- 분석의 효과: 집행 예산, 참여자 수 등 사업의 규모 및 사업 내용의 면밀한 양적 평가는 배제하고 주요 이행과제별 단위 사업의 횟수(빈도)에 기반한 이행정도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알파벳으로 정량화한 것이므로 사업의 대략적 분포를 통한 이행수준을 알 수 있음.

<표 II-4> 정량분석 이행정도 점수구간

S	A	B	C	N
6회 이상	4회 이상-6회 미만	2회 이상-4회 미만	2회 미만	0

○ 정성분석

- 분석대상: 경기 공익활동 관련 기존 연구 보고서³⁾ 이해관계자 심층집단면접(FGI) 내용 및 분석 내용, 부서·도센터·시·군센터 사업보고서 및 회의록, 홈페이지에 제시된 단위사업 내용
- 분석방법: 제1·2기 지원사업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자 평가의견과 사업내용 검토, 정책과제별 성과에 대한 질적 분석, 정책과제-전략목표-비전 연계성에 관한 검토과정을 거쳐 기본계획 3기 기본계획 이행시 개선방안 도출

2. 분석 결과(1): 1기 기본계획

1) 정량분석

<표 II-6> 1기 기본계획에 따른 정량분석

목표	전략	주요 이행과제	2020	2021	2022	계	평균	이행정도		
지속 가능한 공익 활동 성장 지원	공익활동 네트워크 강화	공익활동발전연구	1	2	5	8	2.7	B	B	B
		공익활동 공동 대응력 향상	0	1	2	3	1.0	C		
		공익활동 민관합동 워크숍 개최	1	2	1	4	1.3	C		
		공익활동 홍보채널 활성화	4	4	12	20	6.7	S		
	사회문제 해결 민관협치	시·군별 공익촉진 장려	1	1	1	3	1.0	C	C	
		공익생태계 조성 정책토론회	1	1	2	4	1.3	C		
		지역순회 간담회	1	1	1	3	1.0	C		
		파트너십을 통한 시민사회 역량강화	0	2	3	5	1.7	C		
	공익생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사업지원	2	2	11	15	4.0	A	A	

2) 부서, 도센터, 시·군센터 단위사업 합/해당 연차(1기: 3년, 2기: 2년)

3) 공익활동 발전연구사업(2020),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전수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2021),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기초연구(2022),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 성과분석 및 활용방안 조사(2023), 경기도 공익활동 사회경제기반 조성방안 연구(2023), 경기도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익활동지원센터 비전전략체계 수립 연구(2024)

	계 역량강화	공익활동가 성장지원	0	6	14	20	6.7	S	B
		공익활동 스타트업 지원사업	1	2	2	5	1.7	C	
		비영리민간단체 맞춤형 공익역량강화	1	7	8	16	5.3	A	
	공익활동 기반강화	공익활동촉진위원회 구성·운영	1	0	3	4	1.3	C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운영	2	4	9	15	5.0	A	

2) 정성분석

가. 전략1: 공익활동 네트워크 강화

- 공익활동발전연구: 경기지역 비영리단체 전수조사 등 기초연구를 수행하여 정책지식의 토대를 구축했으나, 상위 전략과의 연관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공익활동 공동 대응력 향상: 네트워크 구축 시도가 있었으나, 양적 확장이 제한적이었고 목적 달성을 위한 체계적 사업이 충분히 가시화되지 못함.
- 공익활동 민관합동 워크숍 개최: 매년 정책토론장을 개최하여 경기도만의 정책적 특성을 형성하는데 기여함.
- 공익활동 홍보채널 활성화: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온라인자료관 구축 등 새로운 시도를 추진했으나, 실제 도달률과 체감도 측면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음.

나. 전략2: 사회문제 해결 민관협치

- 시·군별 공익촉진 장려: 시·군 공익활동단체 공모사업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함.
- 지역순회 간담회: 센터의 위상과 역할을 알리고 지역별 지원 욕구를 파악했으며, 성과가 높았던 사업으로 평가되나, 지역 현장과의 지속적인 관계 형성 측면에서는 보완이 필요함.
- 파트너십을 통한 시민사회 역량강화: 활동가 교류 활성화 시도가 이루어졌으며, 참여자 만족도가 높으나, 지역사회의 실질적 체감도는 낮아 접근방식 재검토가 필요하며, 구조적인 민관협치 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됨.

다. 전략3: 공익생태계 역량강화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사업지원: 부서-도센터-시·군센터 세 주체가 고르게 과제를 이행함.
- 공익활동가 성장지원: 청년공익활동 일자리 지원은 전향적인 시도였고 긍정적 반응을 얻었음.
- 공익활동 스타트업 지원사업: 신생단체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여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수혜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남.
- 비영리민간단체 맞춤형 공익역량강화: 회계 및 세무 지원 등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평가받음.

라. 전략4: 공익활동 기반강화

- 공익활동촉진위원회 구성·운영: 활발한 활동을 시도했으나,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와 논의결과의 정책 반영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고 현장과 멀어진 느낌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운영: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를 시작으로 5개 시·군센터가 개소하여 공익활동의 물리적 기반을 조성함.

3. 분석 결과(2): 2기 기본계획

1) 정량분석

<표 II-8> 2기 기본계획에 따른 정량분석

목표	전략	주요 이행과제	2023	2024	계	평균	이행정도		
공익활동 주체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시민사회조직 및 공익활동가 역량강화사업 확대	다양한 지원으로 공익활동가 지속성 제고	17	10	27	13.5	S	A	
		공익활동단체 운영 및 사업역량강화 지원	17	9	26	13.0	S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인정 방안 마련	정책연구를 통한 공익활동 인정사업 개발·추진	1	1	2	1.0	C		
	비영리일자리 확대 및 시민사회 경제적 기반 조성	비영리일자리 여건 개선 및 확대	0	0	0	0.0	N		
		시민사회 경제적 기반 조성	1	0	1	0.5	C		
연결과 협력 기반 시민사회 생태계 조성	공익활동 참여 다각화 및 역량강화 교육체계 구축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극대화	14	14	28	14.0	S	A	
		사회문제해결형 경기 도민 공론장 활성화	2	4	6	3.0	B		
		경기도민 공익활동 통합교육체계 구축	1	1	2	1.0	C		
	시민참여영역 협력적 네트워크 강화	공익단체 및 활동가 네트워크 활성화	4	3	7	3.5	B		
		시민참여영역 협력체계 구축	5	12	17	8.5	S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목표(G-SDGs)연계 사업 추진	1	0	1	0.5	C		
	시민사회 생태계 기반 조성	공익활동 거점 공간 확충	6	6	12	6.0	S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운영	6	5	11	5.5	A		
		(가칭)경기도 공익활동 박람회 개최	2	1	3	1.5	C		
	시민사회활성화 정책의 효과적 추진체계 구축	시민사회 공익활동 관련 제도 개선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 위원회 역할 강화	2	2	4	2.0		B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 및 센터 위상 강화		시민사회영역 전담부서 기능 강화	0	0	0	0.0	N		
		경기도-시·군 협력체계 구축 및 연계 강화	4	4	8	4.0	A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기능강화 및 운영 효율성 제고	1	2	3	1.5	C		

2) 정성분석

가. 목표1: 공익활동 주체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 시민사회조직 및 공익활동가 역량강화사업 확대: 도센터와 시·군센터 모두 다층적 지원체계를 지속 운영하여 공익활동 주체의 실질적 활동 기반 강화에 기여함.
-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인정 방안 마련: 공익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제도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현장 요구를 반영했으나,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인 추진이 미흡하여 구체적인 제도개선이나 인정체계 구축으로 실현되지 못함.
- 비영리일자리 확대 및 시민사회 경제적 기반조성: 공익활동 주체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중장기 과제로서, 구체적 사업 추진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시민사회의 경제적 지속가능성이라는 구조적 과제를 정책 의제로 설정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제한적 의의를 지님.

나. 목표2: 연결과 협력 기반 시민 사회 생태계 조성

- 공익활동 참여 다각화 및 역량강화 교육체계 구축
 - 홍보사업은 정량적으로 충분히 수행되었으나, 투입 대비 공익활동 참여 다각화라는 실질적 성과 창출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우며, 홍보의 본질과 세대별 맞춤 전략의 필요성이 제기됨.
 - 현장의 의제 중심 협력 요구에 대응하여 의제발굴단을 통한 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 운영 등은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냄.
 - 공익활동 통합교육체계 구축을 목표로 설정했으나, 실제로는 단발적 교육 실시에 그쳐 목표 달성이 미흡함.
- 시민참여영역 협력적 네트워크 강화
 - 공익활동가대회, 네트워크 간담회 등이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연결과 협력의 장을 제공함.
 - 1기업-1단체 공익파트너십 캠페인은 민-민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며 행정 차원의 한계를 넘는 실효성 있는 자원 연결 방안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창출함.
- 시민사회 생태계 기반조성
 - 도센터 및 시·군센터의 공간대관 및 공유공간 지원은 물리적 거점 역할 및 네트워킹을 촉진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며 구조적 기반을 마련함.
 - 온·오프라인 통합 지원체계는 공익활동의 지속가능성과 확장성을 위한 기초 인프라 사업으로서 차별적 의의를 가짐.
 - 경기도 공익활동 박람회는 연 1회 개최로 수치적 실적은 제한적이나, 시민사회 생태계 전반의 가시성 제고와 사회적 인식 확산이라는 정성적·전략적 가치를 지님.

다. 목표3: 시민사회활성화 정책의 효과적 추진체계 구축

○ 시민사회 공익활동 관련 제도 개선

-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이행과제로 제시하였으나, 제도 개선이라는 목적과 위원회 운영이라는 수단이 혼재된 과제 설계로 인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 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움
- 위원회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소위원회 등 보다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추진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 및 센터 위상 강화

- 부서-도센터-시·군센터의 연계 협력 노력이 확인되나, 현장에서는 정책적 변화를 실질적으로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제기됨.
- 공익활동 지원체계의 분산성과 조정 기능의 부재가 핵심문제로 지적되며, 정책 총괄 기능과 자원 조정 권한을 갖춘 전담조직의 필요성이 일관되게 제기됨.
- 이는 조직 개편을 수반하는 구조적 과제이므로 단기간의 성과로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4. 시사점

1) 경기도 지원사업의 경향

“제1기 시·군 지역 연결, 제2기 다양한 지원사업 시도에 중점을 두면서 활동가와 단체지원을 중심으로 기본적인 지원사업 체계는 구축됐다”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조례 제정 이후 초창기 기반구축과 지역 연결(1기)을 거쳐 다양한 지원사업의 시도와 발전(2기)에 중점을 두었으며, 지원사업 영역 중 단체와 활동가 지원은 안정화되었으나, 나머지 시민공익활동, 네트워크·자원연계, ‘아카이빙·조사연구’, ‘인프라공간’ 영역은 상대적으로 덜 활기를 띠어 활성화 방안이 요청됨.
- 특히, ‘인프라공간’의 경우 북부센터 개소로 여건이 개선된 반면 도센터(남부센터) 사무공간 이전으로 남부지역 공간지원사업이 중단되어 향후 개선이 요청됨.

2) 기본계획과 지원사업의 연관성

“제1·2기 기본계획의 과제 중 이행이 진전된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이행이 미흡하거나 공백상태로 남아 있는 과제들도 있어 이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 제1기 기본계획은 “지속가능한 공익활동 성장지원”을 통해 “경기도 공익활동 활성화 생태계 구축”을, 제2기는 “도민이 함께하는 공익활동, 변화를 만드는 경기”를 비전으로 설정함.

- 제1·2기 기본계획의 과제 중 이행이 진전된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이행이 미흡한 과제들도 있어 이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
- 이행이 미흡한 ‘사회문제 해결 민관협치’(제1기), ‘시민사회활성화 정책의 효과적 추진체계 구축’(제2기)의 과제에 접근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이 필요함.

3) 3기 기본계획의 기본방향

“경기도가 지니는 위상과 3기 기본계획으로서 영향력 확대를 위해 유지·발전시킬 영역과 새롭게 시도할 전향적인 영역의 균형있는 배치가 필요하다”

- 경기도의 경우 광역 시·도 중 유일하게 시민사회와 공익활동 기본계획을 운영하고 있으며⁴⁾, 전국을 통틀어 3기째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경우는 유일무이함.
- 그럼에도 아직 우리 사회에서 시민사회와 공익활동 관련 정책환경이 무르익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정책의 발전이나 전환을 도모하기 어려워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

4) 추진체계 관련1: 민·관 영역 간 협력구조

“현재 관련 정책의 추진 역할이 공익활동지원센터에 편중돼 있는데, 이후 다양한 민·관 영역을 넘어서는 역할분담에 기반한 협력구조가 필요하다”

- 시민사회 공익활동 활성화 정책의 추진에 있어 공익활동지원센터에 역할이 편중돼 있음.
- 시민사회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은 공익활동지원센터의 기관 사업계획이나 담당부서만의 업무가 아님.

5) 추진체계 관련2: 시·군 중심주체 형성과 협력 강화

“그간 경기도 광역 차원 중심의 정책추진을 넘어 31개 시·군 기초 단위에서의 시민사회·공익활동 지원정책의 활성화로 주안점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 지난 5년은 시민사회와 공익활동 지원정책의 초창기로서 정책의 토대를 다지기 위해 주로 경기도 광역 중심의 지원사업이 추진됨.
- 관련 조례는 시민사회를 도민이나 단체가 공익활동을 펼치는 영역으로 규정하는데(제5조), 여기에는 추상적 차원과 구체적 차원이 존재함.
- 향후 31개 시·군 단위 시민사회와 공익활동 활성화와 이를 위한 지역별 지원체계 구축은 관련 정책 추진에 있어 중요한 과제로 설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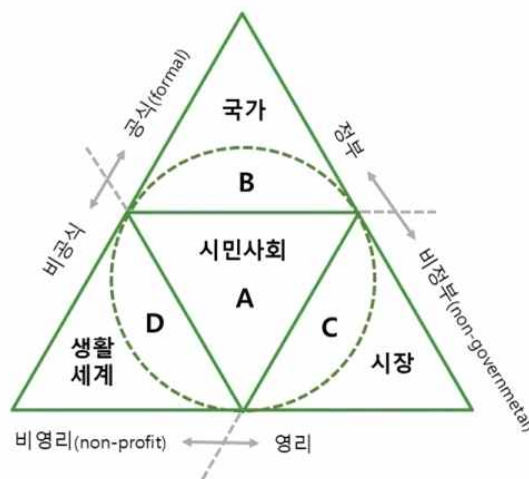
4) 서울특별시와 충청남도가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지만, 시행되지 않은 바 있음.

III. 정책환경진단

1. 지원정책의 범주

“시민사회 공익활동 지원정책의 범주는 시민사회 본원적 부문에 관한 ‘주체 지원’과 넓은 의미로서 시민사회 전반의 ‘생태계 조성’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 역사적으로 시민사회는 선형적으로 존재하는 영역이라기보다는 국가(정부)나 시장(기업) 영역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들과 구별되는 의미와 역할을 지닌 영역으로 개념화됨.
- 시민사회의 발전, 그리고 시민사회와 다른 영역 간 상호작용의 변화에 따라 본원적인 시민사회 부문과 함께 시민사회와 다른 영역 간 융합이 이뤄지는 부문도 넓은 의미의 시민사회(B+C+D 부문)로 포괄할 수 있음.
 - 시민사회와 정부 영역이 중첩되는 지점에서 ‘거버넌스’나 ‘협치’ 부문(그림에서 B부문)⁵⁾
 - 시민사회와 시장 영역이 중첩되는 지점에서 ‘사회적 경제’ 부문(C부문)⁶⁾
 - 시민사회와 생활세계 영역이 중첩되는 지점에서 ‘유연자발집단’이나 ‘비공식 공익활동’이 이뤄지는 부문(D부문)



[그림 III-1] 시민사회의 범위와 구성 부문

- 정책대상과 목적을 크게 ‘주체 지원’과 좀 더 간접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는 ‘생태계 조성’⁷⁾ 등 두 갈래로 구분해 볼 수 있음.

5) 여기에는 중간지원조직이나 협치, 주민자치회, 주민참여예산, 청년정책네트워크의 활동들이 포함될 수 있음.

6) 여기에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소셜벤처 등의 활동 주체들이 포함될 수 있음.

7) 최근 부각되고 있는 정책용어인 ‘생태계 조성’은 일반적으로 관련 분야의 구성 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 혁신을 이루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함.

- ‘주체 지원’에 있어서는 주로 본원적인 시민사회(A부문)가 연관되며, 주로 단체(그리고 이에 종사하는 활동가)를 위한 지원과 이 부문에 진입해 공익활동을 하고자 하는 시민(개인 혹은 모임)이 지원 대상이 됨.
- ‘생태계 조성’에 있어서는 넓은 의미의 시민사회(A+B+C+D부문)가 모두 관련됨. 이에 따라 넓은 의미의 시민사회 주체 간 연결과 협력, 시민사회와 공익활동 전반의 사회적 인정·지지 증진을 위한 지원이 이뤄짐.

2. 정책환경의 영향

1) 정책환경의 변화 동향

“시민사회와 공익활동 정책은 문재인 정부 시기 긍정적인 진전을 이뤘지만, 2022년 정권교체와 지방 선거를 계기로 후퇴가 나타난 후 최근 조기 대선을 계기로 다시금 변화가 예상된다”

- 시민사회 관련 정책의 유의미한 흐름은 중앙정부보다는 개혁적 성향의 지방정부로부터 형성됨. 2009년 광주NGO센터 설립부터 2010년대 들어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시민사회와 공익활동 관련 조례 제정, 중간지원조직 설립, 관련 정책사업 추진이 진행됨.
-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 들어 이전 정부에서 제정된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폐지 및 20여 년간 이어져 온 국무총리실 시민사회위원회의 운영 중단,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회계감사 실시 등을 추진하면서 관련 정책환경의 악화 경향이 나타남.
- 2019년 조례 제정과 함께 본격화 된 경기도 시민사회 공익활동 지원정책은 최근의 부정적인 정책 환경 변화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음.
- 2025년 정치상황의 변화에 따라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서 시민사회 영역에서는 다시금 시민사회와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과제를 각 정당에 제안함.
- 이재명 정부가 수립한 123대 국정과제 중 9번째 과제인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에 “시민참여와 속의, 민주시민교육 및 시민사회 활성화를 담당하는 (가칭)‘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근거법령 마련”을 포함함.

2) 정책환경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 제기

“시민사회와 공익활동 정책은 정치환경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어 향후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정책적 위상 강화가 필요하다”

- 시민사회 공익활동 정책의 이해관계자들도 정치환경이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인식하고 목소리를 내음.
- 정치환경으로부터의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들에 관해서도 다양한 의견들도 제출되고 있음.

3. 사회적 인식 제고 필요

1) 시민사회에 관한 사회적 인식의 현실

“정치환경과 시민사회의 변화에 따라 사회적 인식 형성이 더딘 현실은 지원정책의 발전에 근본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닌 근본적인 사회적 가치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시민사회에 관한 사회적 인식 부족이 공익활동과 지원정책 현장이 겪는 어려움의 뿌리를 형성하고 있음을 꾸준히 지적해 옴.
- 사회적 인식 부족의 원인으로 정치적 편견과 오해, 공익활동 주체들이 시민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부족 등을 지적하고 있음.
- 사회적 인식 부족에 대한 한탄이나 수동적 대응을 넘어, 시민사회와 공익활동이 지니는 근본적인 사회적 가치를 재확인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음.
 -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는 시민사회 공익활동은 인류의 본성에 해당하며, 이 과정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하는 단체는 대부분의 민주적 국가들이 헌법상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는 ‘결사의 자유’를 실현하는 과정임.

2) 사회적 인식 증진 방안 모색

“시민사회와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과 대중과의 관계형성의 관점에서 기존에 추진해 온 홍보를 넘어 보다 전향적이고 지속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 경기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은 사회적 인식 부족의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데, 우선은 시민들에게 시민사회와 공익활동, 그리고 관련 정책을 알리는 홍보의 필요성이 제기됨.
- 사회적 인식 개선이 “단순 홍보”라는 정책수단만으로 충분히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인식 속에 “시민과의 접촉을 넓혀 나갈 수 있는 노력”을 주문하고 있음.
- 정책 이해관계자들은 사회적 인식개선을 넘어 시민사회와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위한 여건 조성으로 나아가야 하며, 이를 위해 교육이나 연구, 제도개선 등 다양한 수단을 제시함.

4. 공익활동의 경제적 가치 조명

1) 경제적 가치 부각의 흐름

“시민사회 공익활동 본연의 정치·사회적 가치와 함께 그것이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 그리고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경제적 토대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 시민사회가 발달한 국가들의 경우 공공부문과 시장부문의 일자리의 성장은 둔화된 반면, 시민사회 부문의 일자리는 활성화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비영리 공익활동은 언제나 경제적 자원을 필요로 하고, 또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 왔지만, 그 자명한 사실은 대부분 간과되어 왔음. 이제 시민사회 공익활동의 경제적 측면을 인정할 때가 됐음.
 - 시민사회 공익활동이 창출하는 대표적인 경제적 가치로 국내총생산(GDP) 혹은 지역내총생산(GRDP)과 고용창출에 대한 기여분을 들 수 있음.
- 모든 세대에서 일정 비율의 인구는 비영리 부문 일자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들을 위한 충분한 직업선택의 기회 마련을 위해 비영리일자리 활성화가 필요함.
- 아울러 시민사회 공익활동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도 하지만, 그 활동의 지속을 위해 경제적 자원과 기반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음.

2) 경제적 가치 활성화의 필요성

“시민사회 공익활동이 지닌 경제적 가치와 요구를 인정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은 정책위상 강화와 사회적 인식제고에 기여하는 선도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

- 경기도 시민사회 공익활동 정책 이해관계자들은 시민사회의 경제적 가치 및 기반에 관한 현장의 경험으로부터의 의견들을 제출해 왔음.
-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관련 조례 개정과 연구사업을 진행한 바 있음.

5. 정책사례로부터의 시사점 참조

1) 국내사례: 시·도 지원사업

“전국 시·도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지원사업에 유형이 형성되는 가운데, 단체·활동가 지원은 ‘필수’, 시민공익활동 지원은 ‘선택’, 나머지 기반조성 관련 유형들은 ‘부족’의 경향을 보인다”

- 2023년 수행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 시·도 시민사회 공익활동 정책의 주축을 이루는 지원센터

의 지원사업에서 대체로 ‘단체성장’, ‘활동가 역량강화’, ‘시민공익활동’, ‘네트워크·자원연계’, ‘아카이빙·조사연구’, ‘인프라 공간’ 등 6가지로 유형이 나타남.

- 지원사업의 6가지 유형별로 다른 발전양상을 나타내고 있음.
- 경기도 역시 ‘단체성장’과 ‘활동가 역량강화’ 관련 지원사업이 안착된 가운데, ‘네트워크·자원연계’, ‘아카이빙·조사연구’ 부분도 지원사업이 활성화됨.
- ‘인프라·공간’ 영역의 경우 관련된 사업이 추진되다가, 공익활동지원센터 공간 이전 이후 사정상 중단된 바 있음.

2) 국외사례: 각국의 유관정책사례

“각국의 유관정책사례로부터 정책추진 역할분담, 부서 간 협력, 비영리일자리, 기부 활성화, 지역거점 등에 관한 유의미한 시사점을 포착할 수 있다”

- 정책추진 역할분담: 영국 ‘시민사회 전략’(civil society strategy)
 - 우리 사회에 있어서도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은 공익활동지원센터뿐 아니라—물론 센터가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지만—다양한 기관이나 단체,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협력해 추진해야 할 과제라는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시사함.
- 부서 간 협력: 스웨덴 ‘정부와 시민사회 간 대화와 협의를 위한 국가기구’(NOD)
 - 우리 사회에서 시민사회 공익활동 활성화는 담당부서(경기도의 경우 소통협치관실 도민협력팀) 만의 업무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 대부분의 부서에서 각 정책영역과 관련된 시민사회 부문 간 지원·협력이 이뤄지고 있음(예를 들어 여성정책과와 여성단체). 다양한 부서에서 이뤄지는 시민사회 관련 정책 간 유기적 연계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비영리일자리: 미국 비영리단체 지원 정책
 - 시민사회단체들은 시민들의 결사의 자유를 실현하는 통로임과 동시에,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펼치는 사업자들로 볼 수 있음. 이들이 유능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 제공자로, 그리고 유의미한 비영리일자리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
- 기부활성화: 폴란드 ‘백분율 세금 지정제도’
 - 백분율 세금 지정제도(Percentage tax designation)는 주로 동유럽 국가들이 공유하는 독특한 시민사회 지원제도임. 대표적인 사례인 폴란드의 경우 국민이 납부하는 소득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호하는 단체에 후원하도록 연결하고 있음.
- 지역별 지원거점: 에스토니아 ‘지역개발센터’
 - 지역개발센터 사례는 중앙과 지역, 경기도의 경우에 적용해 보면 광역(도)와 기초(시·군) 간 지원의 거점과 거점 간 유기적인 연결의 중요성과 가능성을 시사함. 참고로 15개의 지역개발센터를 운영하는 에스토니아의 인구는 130만명 규모임.

IV.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숍 결과 분석

1. 워크숍 개요

1) 참여형 계획 수립의 의미

- 3기 기본계획 추진 방향과 목표, 정책과제 도출이라는 연구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참여형’ 방법론을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함.
- 최근 정책연구에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연구의 타당성과 현장 적합성의 확보, 그리고 지역사회 주체들의 성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참여 실행연구(participatory action research) 방법론이 활성화되고 있음.
-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같은 정책연구는 시민사회 현장의 요구에 조응하고 시민사회 주체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며, 전문성을 갖춘 연구진과 함께 민·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계획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때 계획의 구체성이 담보되고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2) 워크숍 개요

가. 목표

- 1·2기 기본계획 이행성과 평가,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정책 및 제도 진단, 3기 기본계획의 추진 방향과 전략 등 비전 체계도(안) 작성

나. 구성

- 이해관계자 집단을 대표하는 주체들 10인 내외로 구성하여 집중적인 논의와 숙의적 대화가 가능하도록 했음.
- 워크숍 참여자는 활동지역과 활동 분야가 편중되지 않도록 구성했으며, 성별 비중을 고려하여 9명 선정함.
- 공식 참여자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과 이행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경기도청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도 참석하여 워크숍을 지원하였음.

다. 경과

- 연구진은 워크숍 참여자들에게 핵심 주제에 관한 초안 및 타 광역 시도 기본계획 사례 등 매 워크숍 주제와 관련한 참고자료 사전 제공

- 주제에 따라 워크숍 전에 질문지 배포, 사전 의견 조사 실행
- 참여자들은 연구진에서 제공한 자료를 사전 학습 후, 주제를 숙지한 후 워크숍 참가
- 매 워크숍을 마친 후 연구진은 다시 워크숍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후속 작업을 하는 방식으로 1·2기 기본계획 평가와 3기 기본계획 비전 체계도 설계
- 매회 3시간 정도, 총 4회 진행

회차	내용
연구진 분석작업	• 이행성과평가 및 정책환경진단 결과와 담론화 논리 초안 마련 • 이행성과평가 및 정책환경진단에 관한 참여자 사전 의견 조사
1차 워크숍(6/17)	• 이행성과 평가와 정책환경진단 논의 1: 비전·전략 및 이행성과 평가
연구진 후속작업	• 이행성과 평가와 정책환경진단 담론화 논리 구체화
2차 워크숍(7/30)	• 이행성과 평가와 정책환경진단 논의 2: 정책환경분석과 담론화 논의
연구진 후속작업	• 제3기 기본계획 개요 및 사례
3차 워크숍(8/28)	• 제3기 기본계획 비전 체계도 논의 1: 비전과 전략목표
연구진 후속작업	• 제3기 기본계획 비전체계 구체화
4차 워크숍(9/23)	• 제3기 기본계획 비전 체계도 논의 2: 정책과제 도출 및 종합 논의
연구진 후속작업	• 제3기 기본계획(안) 세부 내용 작성

2. 1·2기 기본계획 과제 평가 및 정책환경 진단

1) 기본계획의 의의에 대한 인식

- 시민사회 활동가들은 1·2기 기본계획을 ‘공익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활동가를 지원하려는 정책적 노력’으로 인식함.
 - 전체적으로 “1기의 기본계획의 ‘공익활동 네트워크 강화’ 전략 아래 민관합동 워크숍, 지역 간담회, 청년 활동 참여 등 다양한 기회가 제공되었고, 2기에서는 ‘실효성 있는 주체 지원’ 전략에 따라 공익활동가 재충전 프로그램과 교육, 상담소 운영 등이 활성화”되었다며 정책 효능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평가함.
 - 이를 통해 기본계획이 행정 문서를 넘어 공익활동 현장에서 실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함.

2) 1·2기 기본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 전체적으로 1기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공익활동 활성화 생태계 구축’이라는 비전에 대한 공감대가 높았음.
- 2기의 ‘도민이 함께하는 공익활동, 변화를 만드는 경기’라는 비전에 대해서도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전반적으로 1기의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평가하고 그에 기반한 목표와 전략이 수립’되었다고 평가함.

- 그러나 ‘1기와 2기의 비전과 목표, 전략이 단계적으로 연결되어 세워졌는지’에 평가는 부정적이었음.
- ‘2기 목표와 전략에서 공익활동 활성화 생태계 구축이라는 비전 대신 도민이 함께하는 공익활동이라는 확장성을 제시한 부분이 아쉽다’라는 의견도 제시됨.
- ‘2기까지는 공익활동에 대한 인식 확산과 터다지기 작업을 해야 할 시기’라는 입장에서 ‘도민으로의 확장성은 앞으로 꼭 해야 할 과업이지만, 2기부터 비전에 넣은 것은 이른 감이 있다’라고 평가함.
- 세부적으로는 기본계획과 현실의 괴리, 일회적이고 단속적인 사업 경향으로 인한 사업의 지속가능성 부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중심의 사업 이행, 공익활동 생태계 주체에 대한 성장 전략 부족 등이 지적되었음.

3) 1·2기 기본계획 이행 주요 과제 및 사업 평가

- 1기 기본계획은 ‘공익활동 지원의 전반적 토대 마련 및 공감대 확산’이라는 초기 단계의 목표에 맞게 ‘시민사회를 하나의 테두리 안으로 모아보는 시발점’이 되었음.
- 2기 기본계획은 1기에 비해 전략이 ‘구체화’하고, 사업의 양이 ‘많아지고’, 그 결과 ‘실효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었음.
- 논의결과, 참여자들의 활동 지역과 분야, 세대와 활동 방식의 차이에 따라 평가의 관점에 차이가 있으며, 그에 따라 사업의 영향력이 달리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음.
- 향후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 평가 과정에 지역, 세대, 분야 등 시민사회의 다양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4) 1·2기 기본계획 이행성과 평가에 기초한 담론화 논의

- 연구진은 기초조사를 넘어 해석과 담론화를 지향하는 연구 방향에 따라 1기와 2기의 기본계획 이행성과 평가를 통해 제3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다섯 가지 담론을 제시, 워크숍의 주제로 설정하고 논의하였음.
 - 1기와 2기의 제도적 성과를 바탕으로 풀뿌리 시민사회를 튼튼히 하고, 지역적으로 고른 성장을 지향한다는 방향에서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증진 정책을 한 단계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에 대체로 합의
 - 다섯 가지 담론에 대한 동의 수준이 높았으나, 주제마다 시·군·구의 열악한 공익활동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를 넘어 다양한 축의 연결과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 공익활동의 가치와 역할에 관한 사회적 인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공익활동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됨.

5)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필요한 환경 진단

○ 제도적 기반

- 제도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정책환경에서 핵심적 요소이며,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과 활용, 불합리한 지침과 관행의 개선도 중요함.

○ 시민사회의 역할과 공익활동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정

-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인정방안 마련의 중요성과 공익활동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꾸준한 인식 개선 노력의 필요성 강조

○ 행정의 인식 변화와 수평적 관계 형성

- 행정의 시민사회에 대한 이해와 인정이 매우 중요하며, 시민사회와 행정의 관계가 상호 신뢰와 책임에 기반을 둔 수평적 파트너십으로 변화해야 함.

○ 시민사회 내부의 협력과 네트워크 강화

- 공익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민관협력과 함께 민·민협력도 매우 중요하므로, 시민사회의 다양한 주체들 간의 연대와 협력, 시민과 시민사회조직의 소통과 연결을 촉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함.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공익활동 촉진자 역할 강화

-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중요한 정책환경으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꼽았음.

○ 지원정책에 대한 전환적 인식

- 시민사회 공익활동에 대한 지원은 시민사회의 ‘사회 공헌’, 시민사회의 ‘지속가능성’, 시민사회의 전문성 제고를 통한 ‘정책의 실효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필요함.
- 참여자들은 시민사회조직이나 공익활동 단체를 수혜자로 설정하는 현재 지원정책 프레임에 대한 문제의식과 이런 구도를 극복하기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음.
- 지원정책을 시행할 때 시민사회와의 폭넓은 대화와 소통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

○ 시민사회 자립화 전략의 필요성

- 한편, 정부의 지원이 시민사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었음.
- 참여자들은 특히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에 대한 직접지원에 대해 ‘적절함’과 ‘균형’의 필요성과 시민사회 내부의 논의를 강조함.

3. 3기 기본계획 비전 체계도 설계

1) 비전 설계 원칙

- 비전은 3기 기본계획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제시하는 것으로 사람(people), 방법(practice), 목적(purpose) 요소를 반영하여 수립함.
- 전략목표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3년 동안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결과물로 비전과 전략과제의 연계, 구체성·측정 가능성·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제시함.
- 전략과제는 설정된 전략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주요 사업과 활동으로 1기와 2기의 기본계획 전략과제 중 계속 유지하고, 강화해야 할 과제를 도출하는 한편, 1·2기 기본계획 이행과제 평가 및 정책환경분석을 통해 새롭게 도전해야 할 과제를 추가로 발굴하여 선정함.

2) 기본계획 비전과 전략목표(안)

<표 IV-6> 제3기 기본계획 비전과 전략목표(안)

비전	(1안) 모두의 공익활동, 힘이 되는 시민사회, 활기찬 경기 (2안) 모두의 공익활동, 연결하는 시민사회, 변화하는 경기		
전략목표	1. 지속가능한 지원	2. 유기적 연결과 협력	3. 공익활동 영향력 확산

3) 전략과제 및 사업 아이디어

<표 IV-7> 참여자들이 제시한 제3기 전략과제 및 사업 목록

전략목표	전략과제 및 사업
지속가능한 지원	• 공익활동지원제도개선위원회 운영 • 시민사회 활성화 의제 관련 진단보고분과 설치 • 현행 조례 활용,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제도적 기반 강화 (비영리일자리 조례, 공익활동지원센터 조례 등) • 공익활동 성장지원(교육, 워크숍 등), 공익활동 단체·활동가 역량 강화 • 안식년 제도가 없는 소규모 단체 공익활동가 대상 힐링 호텔 • 비영리일자리 창출 및 지원: 청년 대상 비영리일자리 창출 및 제도화, 지속할 수 있는 비영리일자리 방안, 좋은 일자리 단체 인센티브 제도 • 공익활동 인건비 지원 • 기부금, 후원금 등 공동모금과 지원, 기업의 사회공헌기금 조성 • 시민사회조직의 재정 안정성 기반 마련 • 공동체 기반 자산 (공간, 기금 등) 안정적 운영지원, 공간 설치 지원사업 • 시민 활동 및 시민사회의 자립을 위한 지원정책 활성화 •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지원 및 신규사업 지원: 시설비 지원 혹은 마을공동체 분야 등에서 추진했던 지원관 제도 등을 통한 설립 촉진, 기초 센터가 없는 지역 대상 권역센터 추진 • 1인 공익활동가 지원: 1인 활동가가 활동 경험을 할 수 있는 단체 선택, 프로젝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와 같은 비영리 부문 지원 • 시민사회 연구 활성화 (경기연구원 내 시민사회연구실), 전문가 양성 및 지식 생태계 구축

유기적 연결과 협력	• 민관, 민관정의 정기적 정책 간담회, 연례회, 대화의 장(도지사, 시·군 자치단체장) 마련 • 경기도 공익넷 구성 및 운영 • 시·군에 행정지원관 파견제도를 통한 시·군과 경기도 연결 • 권역별/영역별 네트워크 강화, 공익활동가 네트워크 구축 • 공익단체 간의 융합 의제 개발, 다양한 의제별 콜라보 (협업) 사업 특화지원 • 1년마다 지역 선정, 지역순회 공익활동 페스티벌 사업을 통한 지역 시민사회 활성화 • 1단체×1기업 사업, 공익활동단체와 기업이 만나는 장
공익활동 영향력 확산	• 공익활동의 가치와 성과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사업: 공익활동 전국대회 경기도 개최, 아시아태평양대회, 대통령 초청 등 대규모 공익활동 축제, 행사, 공익활동 성과 공유회 등 • 경기도민 참여구조 마련 (공모사업 활성화 등) • 민주시민교육·공익활동 교육 강화: 시·군 지자체 공익활동 교육 강화, 주민자치, 민방위, 도서관 등으로 민주시민교육 확산, 청소년 대상 공익활동 교육 등 • 경기시민대학 • 공론 활성화: 도민 공론의장 체계 마련, 도민, 시민 등 공론장 제도 활성화, 사회적 대화 활성화 •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 공익활동가 사회적 인정제도 구축, 사회적 인정제도 마련을 위한 실무위원회 구성, 무급 공익활동가의 공익활동 경력인정, 공익 사회적 가치 지표 개발-민간영역 적용, 공익활동 '단체' '사람' 홍보 및 기록화, 올해의 공익활동대회 시상식, 공익활동 인증제 (봉사시간 인증) • 정당공천 (후보) '공익활동 여부' 기준 마련 • 공익활동도민추진단 운영 (시니어, 청년, 청소년) • 시민참여 기반 확대를 위한 시민의회 운영 • 새로운 공익활동 의제 발굴 • 시민사회/사회혁신 참여예산제

V. 제3기 기본계획(안)

1. 기본계획 비전체계

1) 비전

- 1안: “모두의 공익활동, 힘이 되는 시민사회, 활기찬 경기”
- 2안: “모두의 공익활동, 연결하는 시민사회, 변화하는 경기”

○ 비전 구성의 3가지 요소인 주체, 수단, 목적에 있어 다음과 같이 논의를 수렴함.

- 주체: 정책과 실천의 주체로서 ‘모두’를 호명. 공익활동, 그리고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은 특별한 사람, 일부 부서·기관이 아닌 도민 모두의 일임을 강조
- 수단: 공익활동을 통해 함께 이룰 수 있는 성과이면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서 ‘시민사회’ 제시. 1안은 활성화된 시민사회가 우리의 삶에 힘이 될 것이라는 효능을 강조. 2안은 발전된 시민사회의 모습으로서 연결을 강조
- 목적: 공익활동 증진과 시민사회 활성화를 통해 기대하는 효과를 표현. 근거 조례에는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 1안은 공익활동이 기여할 수 있는 발전의 부문으로서 활력을, 2안은 공익활동을 통한 변화를 강조

2) 전략목표

○ 제3기 기본계획 전략목표의 기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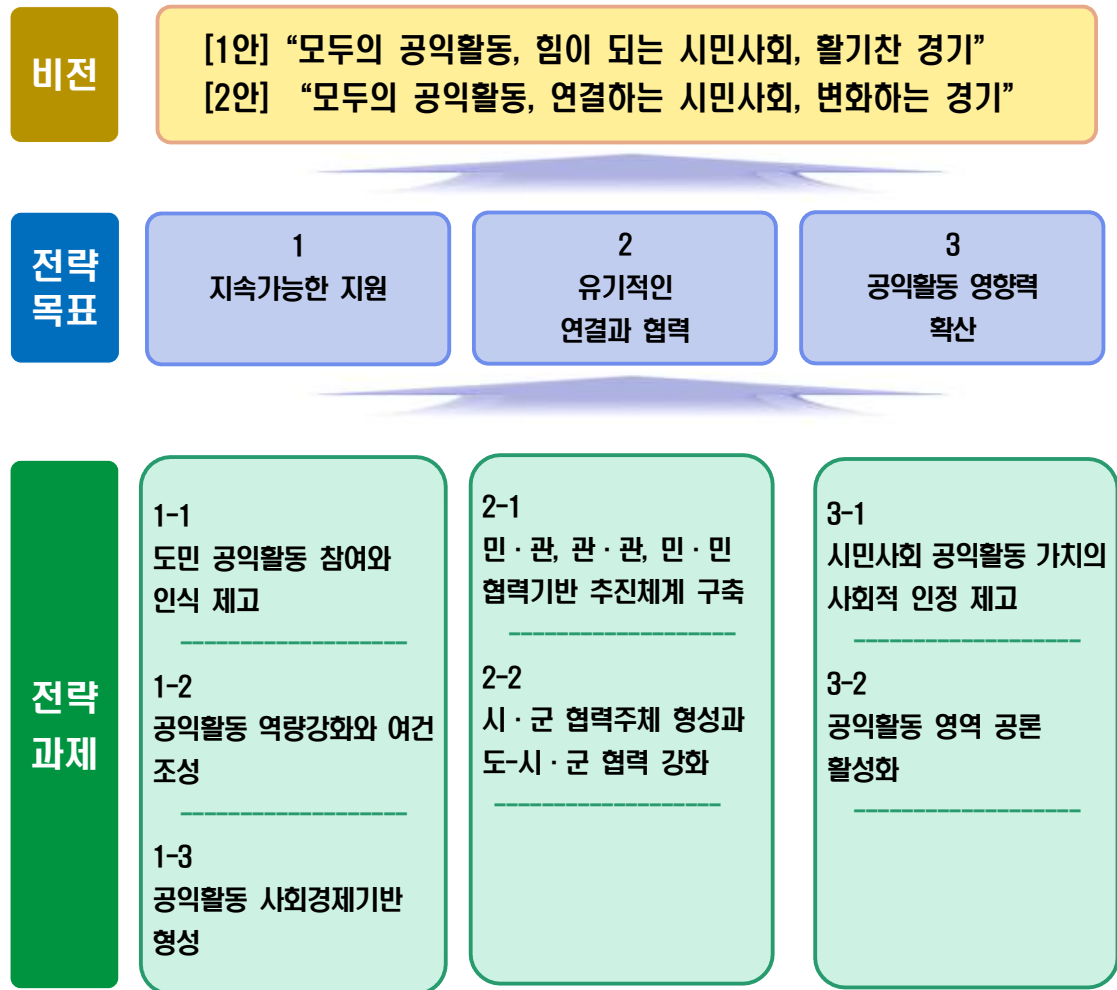
- 제3기는 제1·2기 기본계획 추진을 통해 도출된 성과와 한계를 고려해 녹록지 않은 정책환경 속에서 좀 더 근본적인 의제들에 접근하고자 함.
- 아울러 선언적인 수준을 넘어 실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략적 접근에 주안점을 둠.

○ 제3기 기본계획 전략목표는 ‘지원사업’ 지속과 더불어 ‘연결된 추진체계’와 ‘사회적 영향력’에 집중해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자 함.

- [전략목표1] **지속가능한 지원**: 담당부서와 도센터를 중심으로 추진해 온 기본적인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안정화와 지속적인 확대·개선
- [전략목표2] **유기적인 연결과 협력**: 민-관, 민-민, 도-시·군의 다양한 영역과 주체들의 연결과 협력에 기반한 시민사회와 공익활동 정책 추진체계의 근본적 전환
- [전략목표3] **공익활동 영향력 확산**: 사회적 가치실현과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과 정책과정에 공익활동 주체(참여도민)의 목소리 수렴·반영 강화

3) 전략과제

- 앞서 논의한 비전과 전략목표의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3가지 전략목표에 걸친 7가지 전략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함.



[그림 V-2] 제3기 기본계획 비전체계

2. 기본계획 전략과제

1) [전략과제 1-1] 도민 공익활동 참여와 인식 제고

도센터와 시·군센터를 중심으로 그간 추진해 온 도민 공익활동 참여 확산과 공익활동을 복돋우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개선해 나가야 함.

가. 도민의 공익활동 참여 확산

- 도민의 공익활동 참여 증진을 위한 직접 지원사업의 지속·확대 추진
- 기본적으로 도민을 만나고 도민의 공익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역할은 시·군 단위에서 수행하고, 경기도는 도민의 공익활동 참여를 복돋우는 역할 분담이 바람직('전략과제 2-2' 관련)
- 다만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나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경기도 차원의 도민 공익활동 참여 직접 지원사업 필요

나. 도민의 공익활동 기반 확대

- 도민의 공익활동을 복돋우는 기반을 조성하는 간접 지원사업의 지속·확대 추진
- 특히 도민이 일상적으로 만나고 도모할 수 있는 공유공간 확충은 공익활동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요청되는 과제로 제3기 기본계획에서 전향적 접근 필요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간 이전 과정에서 폐지된 공유공간을 다시 마련 필요
 - 공유공간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공유공간 연계·지원을 위한 방안 모색

2) [전략과제 1-2] 공익활동 역량강화와 여건조성

그간 담당부서와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안착된 공익활동단체와 활동가 지원을 지속·확대하는 가운데, 지원의 효과성과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개선도 요청됨.

가. 단체와 활동가 역량강화 지원

- 공익활동단체와 활동가 지원사업의 지속·확대 추진
- 공익활동단체와 활동가 지원사업 역시 현장에 밀착한 지원은 시·군 단위에서 수행하고, 경기도는 개별 시·군 단위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전반적인 여건 조성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전략과제 2-2' 관련)

- 다만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나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경기도 차원의 공익활동단체와 활동가 지원사업 필요

나. 지원사업의 개선

- 공익활동단체와 활동가 지원사업의 개선 요청은 크게 규모의 확대와 지원방식의 변화 등 두 가지로 나뉘볼 수 있음.
- 지원규모: 공익활동 현장에서는 기존의 지원사업이 도움이 되지만, 현장의 규모와 여건에 비춰볼 때 아직 부족함이 많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지원방식: 주로 공모를 통한 보조금 지원에 기반한 지원방식의 효과성과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사업형태나 관련 제도개선이 요청되고 있음.
- 그간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지원사업 개선을 위한 과제를 정리하고, 가능한 것부터 개선작업 추진(제도개선의 경우 ‘전략과제 3-2’와 연관)

3) [전략과제 1-3] 공익활동 사회경제기반 형성

제3기 기본계획을 통해 공익활동의 사회경제기반 형성을 공익활동주체와 지원주체들의 중요한 의제로 설정하고, 실현가능한 단초를 마련해야 함.

가. (가)공익활동사회경제기반TF 운영을 통한 의제화

- 아직 활동과 지원주체 모두에게 생소한 공익활동 사회적경제기반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책임 있게 이끌어 갈 단위가 필요함.
 - (가)공익활동사회경제기반TF에는 담당부서와 센터 관계자, 관련 전문가, 해당 의제에 이해관심을 지닌 공익활동 주체 참여
- 연속적인 워크숍을 통해 공익활동 사회경제기반에 관한 학습, 사례공유, 가능한 추진과제 수렴·선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활동결과를 백서로 정리하는 한시적 성격의 단위

나. 공익활동 사회경제기반 시범사업 추진: 비영리일자리 활성화

- (가)공익활동사회경제기반TF 활동을 통해 도출된 과제 중 하나를 선정해 시범사업 추진
- 현재 사회적으로 공익활동 사회경제기반 형성에 관한 다양한 논의와 실천이 진행되고 있음.
- 특히 조례에 명시돼 있는 ‘비영리일자리 활성화’는 시범 사업의 우선순위로 고려. 2025년 추진된 관련 연구 과정에서 다양한 추진방안들이 제안된 바 있음

4) [전략과제 2-1] 민·관, 관·관, 민·민협력기반 추진체계 구축

향후 민·관의 다양한 영역과 주체를 아우르는 협력에 기반해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추진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함.

가. 관·관협력: 관계부서 협의체 구성

- 시민사회와 공익활동 관련 담당부서는 소통협치관실 도민협력팀(주무관 3인)이지만 경기도 조직도 업무분장상 유관업무가 여러 부서에 산재해 있음.
- 시민사회와 공익활동 활성화 정책의 관점에서 원활한 유관업무 관·관협력을 위해 관계부서 협의체 구성
 - 소통협치관실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간사 역할을 수행하고, 유관부서 팀장·주무관, 산하기관(중간지원조직) 담당자로 구성된 정례 협의체 구성·운영
 - 협의체를 통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기본계획 공유, 부서·기관 간 사업계획 공유, 협력방안 논의

나. 민·관협력: 민·관·정 간담회, (가)경기공익거버넌스

- 경기도 민관협치 기본계획(2024-2027)은 ‘도-시민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과제로 제시하고 민·관 간담회 개최를 그 내용을 제시하고 있음.
 - 하지만 간담회의 목적이 주로 경기도와 시민사회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협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 물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도 필요하지만, 정책에 협력할 시민사회를 강화하기 위한 논의도 중요함.
 - 이를 위해 정례적으로 협치위원, 경기도 시민사회 대표, 담당부서(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도의회의 소관 상임위 소속 의원 공동의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정책을 위한 민·관·정 간담회 개최
- (가)경기공익거버넌스 추진
 - 경기도에서 이미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의 경기복지거버넌스와 여성 분야의 경기여성거버넌스 사례를 참조해 (가)경기공익거버넌스 추진 필요

다. 민·민협력: 시민사회-기업 협력사업 확대

- 공익활동 주체 간 네트워크 구축, 국제협력 등 기존에 추진해 온 민·민협력 지원사업은 확대하는 가운데, 1기업-1단체 공익파트너십 캠페인으로 시작된 기업과 시민사회 간 협력 확대
- 기업-시민사회 간 협력 및 이를 촉진하는 신규 지원사업 개발·추진

- 최근 기업의 사회적 가치 추구의 기준인 ESG에 있어 환경(E)과 거버넌스(G)는 활성화된 반면 상대적으로 논의와 실천이 미흡한 ‘사회’(S) 영역에 전략적 접근 필요

5) [전략과제 2-2] 시·군 협력주체 형성과 도-시·군 협력 강화

31개 시·군이 지역 시민사회 현장을 지원하고 경기도는 이들을 복돋우고 광역적 의제를 다루는 역할 분담에 기반해 협력하는 추진체계 구축이 필요함.

가. 시·군별 협력주체 발굴과 지원

- 가장 긴요한 과제는 31개 시·군별로 조직과 영역을 넘어 지역 시민사회 전체의 문제를 고민하고 경기도와 소통하는 ‘협력주체’가 필수적임.
- 31개 시·군에 센터가 설치된 자원봉사 영역과 아직 소수 지역에 센터가 설치된 시민사회·공익활동 영역 사이의 발전단계에 있는 마을공동체 영역으로부터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 경기도는 시·군 지역 시민사회의 협력주체를 발굴하고 역량강화와 교류를 위한 지원이 필요함.

나. 다양한 도-시·군 네트워크 활성화

-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와 협력주체 간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
 - 경기 지역 ‘자원봉사센터협의회’, 시·군 마을넷의 네트워크인 ‘마을만들기경기네트워크’ 사례를 참조해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 간 네트워크나 협력주체 간 네트워크 활성화
- 도-시·군 간 정례적인 협의구조 마련
 - 현행 도-시·군 간 협의구조의 확대·개선
 - 공익활동 민·관연석회의: 도-시·군의 담당부서,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도-시·군센터, 시·군 협력주체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네트워크로 정례화 추진

6) [전략과제 3-1] 시민사회 공익활동 가치의 사회적 인정 제고

제3기 기본계획에서는 기본적인 홍보사업은 지속 추진하더라도(‘전략과제 1-1’ 관련),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좀 더 근본적인 접근을 시도해야 함.

가. (가)공익활동사회적인정TF 운영을 통한 의제화

- 그간 이뤄진 공익활동 사회적 인정 관련 경기도 내·외의 논의와 실천현황을 수렴하고, 이후 경기도에서 추진할 사회적 인정 관련 과제를 도출하는 과정을 책임 있게 이끌어 갈 단위 필요
- 연속적인 워크숍을 통해 공익활동 사회적 인정에 관한 학습, 사례공유, 가능한 추진과제 수렴·선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활동결과를 백서로 정리하는 한시적 성격의 단위

- 제3기 기본계획 3년차에는 도출과제 중 하나를 선정해 시범사업 추진

나. 공익활동의 존재감 제고를 위한 공동 캠페인

- 사회문제 해결 공동실천 캠페인: 활성화된 공익활동이 더 나은 경기도를 만드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느낄 수 있는 범도민 캠페인
 - 모두의 문제를 모두의 공익활동으로 해결한다(예: 2026년 세계자원봉사의 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인류의 실천’, 외로움 문제 해결을 사회적 처방으로써 공익활동)
- 공익활동 인식제고 공동 캠페인
 - 공익활동 사회적 가치 확산: 공익활동이 경기도 지역사회 변화에 미치는 긍정적 변화 홍보(예: 서울시NPO지원센터 ‘퍼스트 펭귄 캠페인’)

기 [전략과제 3-2] 공익활동 영역 공론 활성화

공익활동 주체들이 영역과 조직을 넘어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공동의 의제에 관해 논의하고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함.

가.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역할 강화

- 시민사회와 공익활동 정책 초창기부터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활력있는 운영을 통해 그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위원회 운영방식 개선, 분과위원회 설치, 다양한 공론장과의 연계운영 등을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역할 강화 방안 마련
- 아울러 현장에서부터 제기되는 시민사회와 공익활동 발전을 저해하는 제도나 규제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기본계획 등 과제에도 반영됐지만 진전이 이뤄지지 않음.
 - 그 원인 중 하나는 제도·규제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책임있게 다루는 단위의 부재임.
- 현행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산하에 제도·규제개선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가)공익활동제도개선 분과위원회를 설치함.

나. 공익활동 현장의 공론과 정책반영

- 공익활동 주체들이 시민사회와 공익활동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익활동 정책에 관해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구조 마련
- 공동제안의 경험을 기반으로 공익활동 주체들의 공론장 ‘(가)경기공익활동컨퍼런스’ 정례화

- 현재 전국적 연례 캠페인으로 진행되는 ‘공익활동가 주간’과 도센터의 ‘공익활동가대회’가 별도로 진행 중
- 공익활동 주체들의 행사를 결합해 영향력을 높이는 한편, 행사 성격을 넘어 경기도 시민사회의 현황 진단과 미래 전망, 그리고 공동의 목소리를 내고 전략을 세우는 장으로서 ‘(가)경기공익활동컨퍼런스’ 정례화

<표 V-2>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연차별 계획

전략목표	전략과제	실행과제	1년차(2026)	2년차(2027)	3년차(2028)
1 지속가능한 지원	1-1 도민 공익활동 참여와 인식 제고	도민의 공익활동 참여 확산	도민 공익활동 직접 지원사업 지속·확대	도민 공익활동 직접 지원사업 지속·확대	도민 공익활동 직접 지원사업 지속·확대
		도민의 공익활동 기반 확대	도민 공익활동 간접 지원사업 지속·확대	도민 공익활동 간접 지원사업 지속·확대	도민 공익활동 간접 지원사업 지속·확대
	1-2 공익활동 역량강화와 여건 조성	단체와 활동가 역량강화 지원	단체와 활동가 지원사업 지속·확대	단체와 활동가 지원사업 지속·확대	단체와 활동가 지원사업 지속·확대
		지원사업의 개선	지원사업 개선과제 수렴·선정	지원사업 개선과제 추진	지원사업 개선과제 추진
	1-3 공익활동 사회경제기반 형성	(가)공익활동사회경제기반TF 운영을 통한 의제화	(가)공익활동사회경제기반 TF(학습)	(가)공익활동사회경제기반 TF(과제설정)	(가)공익활동사회경제기반 TF(백서발간)
		공익활동 사회경제기반 시범사업 추진			공익활동 사회경제기반 시범사업
2 유기적인 연결과 협력	2-1 민·관, 관·관, 민·민협력 기반 추진체계 구축	관·관협력: 관계부서 협의체 구성	관계부서 협의체 구성 준비	관계부서 협의체 운영	관계부서 협의체 운영
		민·관협력: 민·관·정 간담회, (가)공익활동거버넌스	민·관·정 간담회 추진 준비	민·관·정 간담회 운영, (가)공익활동거버넌스 구축	민·관·정 간담회 운영, (가)공익활동거버넌스 운영
		민·민협력: 시민사회-기업 협력사업 확대	시민사회-기업 협력사업 개발	시민사회-기업 협력사업 운영	시민사회-기업 협력사업 운영
	2-2 시·군 협력주체 형성과 도·시·군 협력 강화	시·군별 협력주체 발굴과 지원	협력주체 발굴·지원을 위한 조사와 협의	시·군별 협력주체 발굴과 지원사업	시·군별 협력주체 발굴과 지원사업
		다양한 도·시·군 네트워크 활성화	도·시·군 네트워크 활성화	도·시·군 네트워크 활성화	도·시·군 네트워크 활성화
3 공익활동 영향력 확산	3-1 시민사회 공익활동 가치의 사회적 인정 제고	(가)공익활동사회적인정TF 운영을 통한 의제화	(가)공익활동사회적인정TF 운영	(가)공익활동사회적인정TF 운영	공익활동 사회적 인정 시범사업 추진
		공익활동의 존재감 제고를 위한 공동 캠페인	공동캠페인 기획	공동캠페인 추진	공동캠페인 추진
	3-2 공익활동 영역 공론 활성화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역할강화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역할강화 방안 마련	역할강화 추진 및 (가)공익활동제도개선분과위원회 운영	역할강화 추진 및 (가)공익활동제도개선분과위원회 운영
		공익활동 현장의 공론과 정책반영	(가)경기공익활동컨퍼런스 개최	(가)경기공익활동컨퍼런스 개최	(가)경기공익활동컨퍼런스 개최

참고문헌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2020. 공익활동 발전연구사업 결과보고서.
- 경기도 소통협치국 민관협치과. 2019. 경기도 공익활동촉진 지원방안 연구.
- 경기도 소통협치관. 2024. 2024-2027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 국정기획위원회. 2025.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 김혜원·박찬임·황덕순·김영용·박종현·전승훈. 2009. 제3섹터 부문의 고용창출 실증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노대명·김신양·장원봉·김문길. 2010. 한국 제3섹터 육성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리프킨, 제러미. 안진환 역. 2012. 3차 산업혁명: 수평적 권력은 에너지, 경제, 그리고 세계를 어떻게 바꾸는가. 민음사.
- 박영선·김성진·신희진. 2022. 코로나 위기 이후, 경기도 공익활동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 박영선·김유리. 2023. (사)시민 10년 활동 진단 및 전망 모색을 위한 연구보고서. 사단법인 시민.
- 용인대학교 산학협력단. 2021. 사회변화에 따른 경기도 시민단체의 역할 재정립에 관한 연구: 정치·인권 및 환경 단체를 중심으로. 경기도의회.
- 이광희 외. 2022. 시민사회 정책과 연구 관련 국제동향 종합조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이호·김소연·조철민. 2022.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기초연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 이환성 외. 2021.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국가 기본계획 실천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조경훈·김종수·장원웅·최유진·이수정·홍상우·장현경. 2023. 경기도 공익활동 사회경제기반 조성방안 연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 조철민. 2015. 시민사회 공익활동 지원제도 개선을 둘러싼 논의의 지형. NGO연구 10(2). pp. 1-34.
- 조철민·강세진·신권화정·김승순. 2021.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전수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 조철민·정란아·박운정·권지현·김유리·김승순. 2024. 경기도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익활동지원센터 비전전략체계 수립 연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2024. 자원봉사 인정 실용 가이드: 환대로 시작하는 자원봉사문화.
- Pestoff, V. 1992. Third sector and co-operative services: An alternative to privatization. Journal of Consumer Policy. 15(0). 21-45.
- WMD. 2012. Defending Civil Society Report(<https://movedemocracy.org/wp-content/uploads/2017/09/English-Defending-Civil-Society-Report-2nd-Edition.pdf>).